

공무원 고시 40% 이공계 뽑는다

공직사회 지각변동 예고한

이공계 진출 확대

글_ 박방주 중앙일보 기자 Bpark@joongang.co.kr

사진_ 이순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진영상담당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지난 8월20일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역대 정권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공계에는 다시없는 선물이며, 국가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뽑는 5급(사무관)공무원의 40% 정도를 이공계 출신으로 충원하게 된다.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본부도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4급 이상 자리를 계급별로 30% 이상씩 이공계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 그 중 상당수는 고시가 아닌 특채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 방안에 따르면 5급의 이공계 출신 신규 채용은 고시형태의 필답고사의 비율을 계속 줄이는 대신, 박사나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특채할 계획이다. 기존 기술고시도 행정고시로 통합한다. 고위 공무원의 행정직과 기술직

구분을 없애 이공계 출신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3급(부이사관) 이상 공무원의 경우 부이사관으로 통합된다. 행정서기관과 기술서기관으로 단순화되는 4급(서기관)의 자리 대부분도 행정직과 기술직 중 누구나 갈 수 있는 복수직으로 바뀐다. 당초 계획은 4급도 직급 구분을 없애려 했었다. 이외에 기술직에 대한 분류를 8개 직군 38개 세부 전공별 직렬에서 5개 직군 15개 직렬로 바뀐다.

산자부 국장 30명 중 기술직은 1명 뿐

공직은 지금까지 인문계 판이었다. 공직 구분으로 보면 행정직이 거의 모든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5월 말 중앙인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급 공무원 59명 중 기술직은 2명, 2급은 270명 중 40명에 불과했다. 기술직이 많이 필요한 산업자원부 국장급 30명 중 기술직은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행정직 위주로 공직이 운영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공직에는 행정직과 기술직 중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복수직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기술직이 앉는 비율이 39%에 머물고 있다. 감사원의 경우 복수직이 9자리 있는데 이 중 두 자리만이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기술직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본부보다는 외청으로 밀려나 있는 것도 기술직 확대의 한 단면이다.

10대 민간기업 그룹 임원의 53%가 이공계 출신이고, 1백대 기업 최고 경영자 38.4%가 이공계 출신인 것과는 너무 판이한 현상이 공직에서는 유지되어 온 것이다.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비율
행정직군	52	270	545	2,964	6,369	16,721	19,566	13,559	7,990	68,036	75.1%
기술직군	2	40	148	999	2,217	5,944	5,641	3,160	1,153	19,214	21.2%
연구지도직	5	14	31	226	818	2,198	0	0	0	3,292	3.6%
계	59	324	724	4,189	9,404	24,863	25,207	16,719	9,143	90,542	100%
기술직군비율	3.3%	12.3%	20.4%	23.8%	22.8%	23.9%	22.3%	18.9%	12.6%		
연구지도직비율	8.4%	4.3%	4.2%	5.3%	8.7%	8.8%	0%	0%	0%		
누계	<기술직군> *3급 이상 : 190/1,107(17.1%)/4급 이상 : 1,189/5,296(22.4%)/5급 이상 : 3,316/14,610(22.6%)										
	<연구지도직> *3급 이상 : 50/1,107(4.5%)/4급 이상 : 276/5,296(5.2%)/5급 이상 : 1,094/14,610(7.4%)										

전문성 부족했던 과학기술정책 활로 찾아

5급 공무원 이상에 이공계 할당제가 도입되고, 그 중 상당수를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특채한다는 것은 그 동안 순환근무제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공직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급 이상은 2008년까지 40%, 4급 이상은 30%로 한 것에는 연구직 등 특수직은 포함시키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기술직에는 이들 연구직까지 포함시켜 숫자만 불려온 경향이 있었다. 이번 정책은 국가정책 수립에 이공계 출신의 기술 마인드와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공계 할당제의 경우도 정책 수립을 하는 자리에 비중을 뒀다. 기술직 공무원의 참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그 동안 곳곳에서 발생했었다.

고속철도 건설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배나 뛰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경우 감사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시스템의 부실 구축이 우려되고,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한·일 어업 실무 협상에서는 쌍끌이 어선을 누락했으며, 복어 채낚기 어선의 안전조업 문제도 보장받지 못한 것도 전문성 부족 탓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었다.

이번 공직진출 확대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공직 곳곳에는 전문성을 갖춘 이공계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같은 국가 정책에 실수 여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기술직의 승진과 전보를 제약했던 각종 인사제도도 고쳐나가게 된다. 그래야 기술직 진출이 계획했던 것처럼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세분화되어 있는 광공업, 물리, 농림수산 등 직군과 기계, 화공, 전기 등으로 나뉜 직렬이 통합 재분류된다. 현재는 8 직군, 38개 직렬로 나뉘져 있었다. 이를 5직군 15개 직렬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어 갈 수 있는 자리도 한정되어 있었다. 즉, 화공전공 자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상급자가 퇴직해야 올라갈 수 있는 등 승진이나 전보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었다. 이를 통합, 재분류함으로써 기술직의 자리에 유연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 기술직이 극히 적어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 직급 통합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3급 이상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 구분



국과위가 열렸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통령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4급 이상 30% 이공계 전문가 특채
고위직에는 행정·기술직 구분 없어

현 행		개선안(예시)	
직군	직렬	직군	직렬
광공업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9)	전기·정보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산(3)
농림수산	농업, 식품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6)		
물 리	물리, 기상(2)	기계·소재	기계, 수송, 소재(3)
보건·의무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약무, 역무, 간호(6)	생명·보건	물리, 기상(2)
환 경	환경(1)		
교 통	교통, 선박, 항공, 수로(4)	에너지·환경	물리, 기상(2)
시 설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5)	사회·기반 (SOC)	물리, 기상(2)
정보통신	전산,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5)		
합 계	8개 직군 38개 직렬	합 계	5개 직군 15개 직렬

※ 기술직 채용 및 인사 운영에서 기술적 전문성(채용)과 정책적 전문성(승진, 전보, 전직 등) 조화 도모 가능



노무현 대통령이 연구원을 격려하고 있다.

을 없었다. 이렇게 되면 3급의 경우 부이사관, 2급의 경우 이사관으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4급은 행정서기관, 기술서기관으로 두 가지로만 나뉘었다. 기존에는 공업서기관, 농업서기관 등 직군별로 이름이 붙어 있었다. 현재 기술직은 2급까지 독자적인 직렬별 직급을 고수해왔다. 이는 서로 오갈데 없게 만드는 두터운 벽이기도 했다.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행정직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기계직	관리관	공업이사관	공업부이사관	공업서기관	기계사무관
농업직		농업이사관	농업부이사관	농업서기관	농업사무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행정직				서기관	행정사무관
기계직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기술서기관	기계사무관
농업직					농업사무관

※ 행정직과 기계직의 직급체계 개편(사례)

필담고시 지양, 경력인정 확대될 듯

내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가 통합 운영된다. 그러나 뽑는 직군은 지금과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다. 즉 기술고시를 행정고시 안에 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고시는 일반행정직, 재정직 등으로, 기술직은 기계직, 토목직 등으로 구분해 뽑았는데 이를 행정고시 안에 모두 넣겠다는 것이다.

기술직의 경우 앞으로는 필담고사로 뽑는 인원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대신 기술사, 박사 등 우수과학기술 인력을 공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이를 위해 경력인정 등의 범위를 크게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의 규정은 민간기업에 근무한 경력은 임용 예정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도 50%를 인정한다든가, 박사 경력도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 종사 경력만 인정하는 등 전문가를 끌어들이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또 기술사나 박사가 아니더라도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을 중견 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앞으로 이런 규정들이 시대에 맞게 손질된다.

‘기득권 저항’ 극복이 열쇠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시행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사문화된다. 이번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도 그렇다. 이공계 공직진출은 시대적 요청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각계 각층의 공직 할당제가 붓물을 이룰 것이 뻔한데 그런 요구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공직 할당제의 경우 현재도 여성, 장애인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 지역할당제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또다른 할당제 요구가 있을 것이다.

기득권층의 저항도 문제다. 현재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등 상당수의 부처에는 이공계 출신이 거의 자리를 못잡고 있다. 몇몇 부처는 할당제에 대해 벌써부터 직무분석을 해본 뒤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만약 행정직도 소화를 못하는데 기술직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버티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직무분석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기술직이 갈 자리는 기술직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 백악관의 경우 공직마다 자격을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여기저기 돌다 온 아무 공무원이나 앉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순환보직이라는 이상한 원칙 때문에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체제이다. 우리 나라 공무원은 전문적인 분야를 알 만하면 다른 자리로 이동해버린다. 만약 수십년간 전문성을 갖춘 백악관 공무원과 우리 나라 공무원이 국제 협상에 임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다.

직무분석과 자리에 대한 자격 기준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직의 60% 정도가 기술직이 적합하다는 조사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25% 정도다.

‘공직진출경로 다양화도 한 방법’

서울대 김광웅 교수는 중앙일보에서 한 좌담에서 공직 진출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내놨었다. 즉 기존 고시, 인턴제, 계약제, 특채 등이 그 방법이다. 인턴을 뽑아 쓰면 자신이 공직에 적합한지, 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공계의 공직진출이 활성화되고, 또 공직에 진출한 이공계 출신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도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공계 출신이 인문적 소양, 즉 경영이나 경제제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대 이공대학의 경우 이공계 커리큘럼에 철학, 경영학,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과목이 들어 있어 인문적 소양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의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중국의 경우 이공계 출신이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

또 중도에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인사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주기적으로 진척도를 점검하고 독력해야 제대로 굴러갈 것이다. 특히 이번 정책이 공무원 계를 뒤집는 일대 혁신이자 개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시절 과학기술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박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등 특별히 배려한 덕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 또한 그런 인사권자의 관심을 얻어야만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과위 어록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 그리고 앞으로 기여해야 되는 몫 만큼 반드시 대우하겠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보람으로 연결되는 대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과학기술자들이 대우를 받도록 모든 것을 고쳐 나가겠다.

과학기술인들이 왜 국가를 현실적으로 이끌어가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지 못할까. 오늘 과학기술을 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 문제를 지적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이공계가 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스라엘도 두 번에 걸쳐 이공계 과학기술인이 총리가 됐다는 등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과학기술인들이 열심히 하면 조금 있다 그런 시대가 우리 나라에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소위 항일투쟁, 반독재투쟁 등 이런 과정이 전체 정치의 과정이었다. 그것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기 때문에 부득이 데모 잘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좀더 넉넉하고 활력 있고 쾌적 하면서도 품위 있는 삶을 누리길 원한다. 그걸 해줄 사람이 과학기술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가 이공계에서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특수한 정치체제 때문이다. 중국의 특수한 과정 때문에 현장에서 지도자가 양성되는 것이다. 우리 정치적 제도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과학기술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그 시대에 각광받는 만큼 자리를 갖게 되어 있다.

이제 한국의 추세가 민주화에서 점차 기술혁신, 과학기술혁신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다. 그것을 넘겨가는 과정에 대통령이 지금 한몫을 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변화는 과학기술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생산양식이 변하면 또 거기에 맞게 변화해 가는 것이고, 오늘날 세계화라는 것도 과학기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 등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킨 핵심적인 발명이고, 거기에서부터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 여러분(연구원)들이 한국을 새로 건설해 가는 일꾼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과학기술인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대통령으로 인식되도록 하겠다. ㉮